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 다 나 은 정 부
	배포일시	2018. 11. 7.(수) 총 9매(본문5, 붙임4)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영한, 서기관 박정혁, 사무관 문종민·이윤하 • ☎ (044) 201-3497, 3507
보 도 일 시		2018년 11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7.(수) 13: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7일,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 ①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 ②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 ③ **(등록기준 조정)**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 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운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 국토부 1차관, 업계·노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혁신 협의체(‘18.4)

- 11월 7일(수)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4.20일 발족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이복남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도 함께 참여

□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76년 도입된 이후,

*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 단일공사는 전문업종만 수행가능(위반 시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 페이퍼 컴퍼니 증가¹⁾,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²⁾, 기업 성장 저해³⁾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 1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선진화방안('09) 등

1)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 증가

2)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 형성

3)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이 종합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걸림돌

-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으며,

-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역규제 폐지 】

- 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 → (개선)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
 - * 외벽 도장공사: (현행) 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 → 건축(종합)도 가능
- ②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 * 전문기업의 복합공사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
- ③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 시행 ('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 우선적용→ '22. 민간공사)
- ④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
 - *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 업종체계 개편 】

- ① ('1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
- ② ('20)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
 - *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
- ③ ('21)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

- ①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 * (현행) 2~12억원 vs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일본) 5천만원
 - ②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
-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 * 소규모의 경미한 종합공사는 전문업체에, 종합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를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서기관(☎ 044-201-3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인포그래픽



칸막이와 다단계없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업역

종합·전문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 종합공사: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시설물 시공 (ex. 토목, 건축 등) /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혹은 전문분야 시공 (ex. 실내건축, 도장, 토공 등)



기대효과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직접시공 확대”
- “상호경쟁 촉진”

- 1 신규고용·투자 확대
 → 상호 등록기준 충족

보완방안

- 2 영세업체 보호
 → 10억 미만 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제한 등



업종

업종 통합 및 실적중심 관리체계 구축



기대효과

- “분쟁·갈등 해소”
- “기술경쟁 촉진”

등록 기준

자본금 요건은 완화, 기술능력 요건은 강화



기대효과

- “시공능력 검증 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노사정은 발주자, 건설기업, 건설근로자 등 산업 참여주체 모두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립된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2018.7.25)」에 기초하여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아래와 같이 혁신해 나갈 것에 합의한다.

1. 노사정은 1976년 도입된 이후 건설기업 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 제한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하여 종합·전문건설기업 간의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한다.

- ①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간의 컨소시엄에 대해 종합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부속된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도급 절차·방법 등에 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② 종합건설기업이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도급을 허용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소액 공사의 종합 건설기업 간 하도급을 제한한다.
- ③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고용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업역제한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의 순으로 해제하되, 전문건설기업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은 영세 기업 보호, 상호 시공경험 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허용한다.

2. 노사정은 건설기술의 발전, 공법의 융복합 등 시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건설업체, 노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업종체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 ①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 낮은 전문성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업종, 건설수요의 변화로 신설이 필요한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단기 업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② 건설기업의 시공역량 제고, 중소 건설기업의 육성, 건설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등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방안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

- ③ 업종개편으로 인한 발주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우량기업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실적 등에 관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업 주력분야 공시제」를 2021년까지 도입한다.

3. 노사정은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기술·기능인력 중심의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본금 요건은 건설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2020년까지 현행 대비 5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되, 영세 부실업체 난립이나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약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추진해 나간다.
- ② 자격등급 중심의 현행 전문인력 보유요건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한 기술역량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건설업체의 고용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에 착수한다.

4. 이 선언문에 담기지 아니한 건설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세부 절차 등은 이 선언문에 부속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른다.

5. 정부는 제1항에서 4항에 걸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발의를 국회에 조속히 건의하고 건설노사는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포함한 후속 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6. 아울러 노사정은 향후에도 부실 페이퍼컴퍼니의 퇴출, 직접시공 활성화,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 일자리 확충 및 질 개선 등을 통해 건설산업 육성·발전과 건설근로자 등 산업 참여주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나간다.

2018. 11. 7.

참고 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계획**

□ 행사개요

- 時 · 所 : 11월7일(수) 12:00~12:45 / 여의도 글래드호텔
- 참석자 :
 - (국토부) 장관, 건설정책국장 등
 - (노동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업 계)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운 회장
 - (혁신위) 서울대 이복남 교수(위원장), 본위원회 위원 18명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05	'5 ▶ 노사정 선언식 개식 및 주요참석자 소개	건설정책과장
12:05~12:25	'20 ▶ 노사정 대표 인사말씀 * 장관 → 건협 → 전문협 → 한노 → 민노 → 위원장	각 3분
12:25~12:30	'5 ▶ 선언문 낭독	건설정책국장
12:30~12:35	'5 ▶ 선언문 서명	노사정대표
12:35~12:40	'5 ▶ 청년 건설인 소감 발표	GS건설 입연지('94)
12:40~12:42	'2 ▶ 국토부 장관 답례말씀	
12:42~12:45	'3 ▶ 기념촬영	